

한·중·일FTA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 경제·지정학적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김봉길**

목 차	
I. 서론	IV.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II.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경제권형성 움직임	V. 결론
III. 한·중·일간의 무역·분업구조와 FTA정책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간의 역내 무역·분업구조의 특징과 3국의 FTA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중·일 3개국 간의 FTA의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 후,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중·일 3국간의 무역·분업구조 및 FTA정책상의 특징으로 볼 때, 한·중·일FTA는 3국간의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간 무역 및 수평적 무역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국간에도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기능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적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역내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제도적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도 한·중·일 FTA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중·일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변국들의 이해가 한데 뒤섞인 정치·경제·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일 FTA가 동 지역의 경제·안보 패권의 구도를 바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일본 도야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다만, 한·중·일FTA를 위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촉진요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시장중심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심화’와 ‘지정학적인 패권주의의 심화’라는 2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중·일간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신뢰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로드맵 작성과 중층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점진적이고 중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협력은 각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하에서 실행가능하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을 중재하면서 3국간의 협력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쉽, 지정학적 요인, 사실적인 경제통합, 제도적 경제통합

I. 서론

글로벌화와 함께 지역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인 지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2010년부터 ASEAN+1이라는 FTA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었고, ASEAN경제공동체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정치·경제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역내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경제권의 공백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시장중심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심화’와 ‘지정학적인 패권주의의 심화’라는 2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북아 지역은 제도적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지정학적으로는 역사적 유산의 미청산, 영토 분쟁 등 극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존재하는 복잡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까지 동지역의 핵심국인 한·중·일간의 제도적 경제권 형성의 지연이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광역경제권 형성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한·중·일간에는 3국간 FTA는 물론 한·중FTA 등 2국간 FTA도 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FTA체결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던 일본이 2011년 11월, TPP협상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동아시아지역 및 아태지역의 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이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TPP참여 표명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고, 동지역에서의 주도권 쟁탈전이 한층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일본의 TPP협상 참여표명 이후 한·중·일 FTA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광역경제권 형성 움직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 및 아태지역에서의 경제권형성과 관련해서는 한·중·일의 정치·경제적 비중을 고려하면 3국중 어느 한나라라도 참여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프레임이던 완성된 협력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광역 FTA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FTA와 관련한 연구 논문은 한·중·일 공동연구결과를 정리한 阿部一郎·三浦秀次郎·NIRA(2008)를 비롯하여, 정인교(2004), Ann, Choong Yong, Baldwin, Richard E and Cheong, Inkyo(2005), 전홍택·박명호(2011) 등 수 많은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이 경제효과, 산업별 영향과 대응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고, 최근의 아태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의 광역경제권 움직임에 있어서의 상호관계, 그리고 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심화와 지정학적 패권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고찰한 논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중·일을 둘러싼 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환경변화와 3국간의 역내 무역·투자, 분업구조의 특징, 그리고 각국의 FTA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3개국 간의 FTA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을 개관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및 한·중·일간의 무역·분업구조를 고찰하고, 한·중·일의 무역정책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FTA의 필연성과 가능성, 정책과제에 대해서 검증한다.

II.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

1.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

2000년대 들어와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세계경제도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경제권,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경제권, 그리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경제권 등으로의 3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움직임이 둔한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지역은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무역·투자를 통한 역내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1990년대까지 역내 제도적 경제권 형성에 소극적이었던 동아시아지역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역내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역내경제권 형성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을 보면, EU, NAFTA와 같은 지역전체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보다는 2국간·복수국간 FTA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보면, 한·중·일이 각각 ASEAN과 FTA를 체결하는 “ASEAN+1” 혹은 ASEAN 각국과의 2국간 FTA를 추진하는 형태가 중심

1)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경제권 형성과 관련해서는 Aggarwal and Shujiro Urata(2006), Scollay(2011) 참조.

이었다. 동아시아지역의 FTA 네트워크는 ASEAN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ASEAN이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있어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주도해온 ASEAN+3을 가맹국으로 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구상 (East Asia FTA : EAFTA)’, 일본이 제안한 ASEAN+6에 의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계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EPEA)’,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APEC가맹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구상(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FTAAP)’ 등이 있다.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권인 EAFTA, CEPEA와 관련해서도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한·중·일간에 주도권 싸움이 지속되었고, ASEAN도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동아시아 광역경제권 구상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 협상에 일본이 참가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과 아태지역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일본과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던 동아시아 광역경제권과 한·중·일 FTA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싸움을 해왔던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2011년 8월, ‘EAFTA 및 CEPEA구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상²⁾을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 광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한·중·일 FTA형성과 관련한 움직임도 활발해 졌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접근에는 미국의 아태지역 진출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TPP협상 참가에 대한 중국의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하겠다.³⁾

2)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구상의 주요 내용은 종래의 주요 4분야(원산지 규정, 관세품목 표, 통관수속,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물품 및 서비스무역, 투자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內閣官房, 2011; JETRO 2012) .

<표 1>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의 광역경제권 구상의 추이

시 기	내 용
2004년 11월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역 (EAFTA) :중국제안, ASEAN+3
2006년 4월	포괄적 경제연계 협정 (CEPEA) :일본 제안, ASEAN+6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FTAAP): 미국 제안
2008년 9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참여 표명:11개국 협상 중(2012년 9월, 제14차 협상)
2011년 11월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파트너쉽(RCEP): ASEAN 제안, ASEAN+FTA 체결국(ASEAN+6)
2012년 5월	한·중·일 FTA:정부간 협상 합의
2012년 8월	RCEP:제1차, ASEAN+FTA국가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을 위 한 기본지침, 목적 등 채택→11월,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 합의

주: 동아시아 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서는 ASEAN이 2011년 11월에 제안
한 EAFTA, CEPEA를 포괄하는 RCEP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출처 : 각종 자료에서 작성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권형성의 허브역할을 해왔던 ASEAN이 주도권 상실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ASEAN은 2011년, EAFTA 및 CEPEA 구상을 통합하는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파트너쉽(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제안하였다. 즉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참가 기준(template)을 만들고, 동아시아 16개국 중에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들부터 광역경제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12년 8월에는 ASEAN +6의 16개국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어 RCEP협상과 관련한 목적, 원칙 등을 담은 기본지침을 정리하였고, 동년 11월의 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 협

3) 일본의 TPP협상참가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봉길(2012b) 참조

상개시에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과 일본도 RCEP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2국간 FTA를 체결한 상태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ASEAN국가들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이 많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인도로 부터의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일부 ASEAN 국가들도 있다(JETRO 2012, 35-38)

2.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활발한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경우를 보면 ‘제도적 경제권의 공백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간에는 3국간 FTA는 물론 한·일, 한·중, 일중 등 2국간 FTA도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고, 각국이 ‘ASEAN+1’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형성의 핵심역량을 가진 한·중·일간의 FTA체결의 지연이 동 지역의 광역경제권 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동 지역에서의 한·중·일 3국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의 경제협력 체제라고 하더라도 한·중·일의 3국 중 한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완성된 경제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지역경제권과 관련해서는 시장주도의 경제협력 (de facto의 경제통합)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역내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정치·경제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제도적 경제권(de jure 경제통합) 형성이 지연되어 왔다. 다만, 2010년부터 ASEAN+1이라는 FTA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TPP가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는 등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을 둘러싼 제도적인 광역 경제권 형성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도 한·중·일을 중심으로 제도적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⁴⁾

4) 한·중·일FTA의 경제효과 등과 관련해서는 정인교(2004), 阿部一郎 三浦秀次郎·NIRA(2008), 日本經濟産業省(2011) 참조

먼저 한·일FTA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부터 정부간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2004년 11월, 제 6차 회담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그 후 2008년 6월부터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일FTA의 기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FTA와 '이익균형' 논리에 대해, 일본의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 등으로 인한 '작게 낚아, 크게 키우자는'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 문제가 정치문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일FTA에 의한 시장개방이 단기적으로는 대일무역적자의 확대 가능성이 커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도 농산물시장 개방,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한국이 미국, EU, 인도 등 경제 대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본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중FTA 협상 등으로 한·일FTA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역사인식 문제, 영토문제 등 정치문제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일FTA에 대해 양국 모두 단순한 통상전략의 수단으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전보장 등 한·일FTA가 갖는 종합적인 대외전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중 FTA를 보면, 2005년부터 민간연구기관 및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되어 2010년 5월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어, 2012년 10월 현재 제4차 협상까지 이루어 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주요 투자대상국이고, 중국과 대만간의 FTA(ECFA)에 대한 대응 등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정치적인 면에서도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태지역에 대한 정치·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이 TPP협상에 참가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하겠다. 다만, 양국 모두 정치·경

제적으로 기대 효과도 크나, 한국으로서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의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및 부품, 전기 전자 및 부품, 지적 재산권 등 상호 민감 분야가 많은 등 경제적 부담도 크다. 따라서 한·중 FTA의 경우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민감 품목 등으로 자유도가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⁵⁾

마지막으로 한·중·일 FTA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개국의 민간 연구기관 및 산관학에 의한 공동연구가 이루어 졌고, 공동연구보고서가 2012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된 3개국 정상회담에 보고되었다.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는 ‘한·중·일FTA’는 3개국 모두에게 경제적 효과 크다는 점과, FTA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①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②WTO규정과의 정합성, ③이익 균형, ④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큰 민감분야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日本經濟産業省 2011). 특히 최근의 영토분쟁 등으로 3국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2012년 11월의 무역담당 각료회담에서 공식협의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원칙하에 이루어진 일정의 성과라고 하겠다.

한·중·일FTA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3국간 경제관계의 상호의존도의 급속한 증대,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 정치·경제적인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의 향후 진전은 한·중 FTA, 한·일 FTA 등의 2국간 FTA, TPP의 진행상황 등과도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간의 무역적자 문제, 민감품목 등 한·일, 한·중 등 2국간 협상에서 대립되는 부분들이 3국간의 협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본과 중국 간의 주도권 싸움을 한국이 중재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중·일 모두 동아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외교통상정책을 밝히고 있고, 한·중·일 투자협정에 합의하는 등 3국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신뢰 관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영토 문제 및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 등의 정치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 역사·영토문제와 같은 정치문제와의 분리원칙을 지키려는 지속적인 노

5) Li(2012)의 중국 사회과학원 등에 대한 인터뷰(2011.10) 등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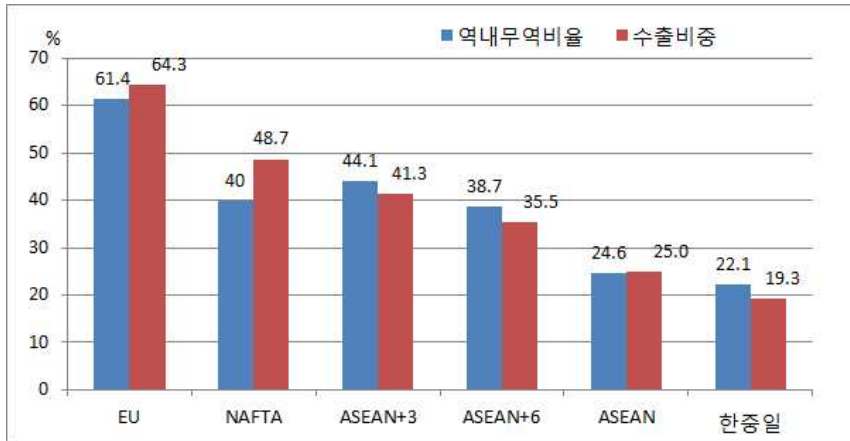
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한·중·일간의 무역·분업 구조와 FTA정책

1. 무역·분업 구조

동북아시아의 핵심국인 한·중·일은 역내무역과 투자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한·중·일 3국간에도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제도적 경제권 형성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중·일 3국의 GDP 및 무역의 세계 비중도 급속히 높아져, 2010년 기준으로 GDP가 19.6%, 수출이 18.5%, 수입이 16.3%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세계인구의 22.1%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한·중·일 3국만으로도 유럽경제권과 북미경제권에 대응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국간의 역내 무역비중은 1990년대 들어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의 WTO 가맹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3국간의 역내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의 20.3%에서 2010년에는 22.2%로 증가하였고, 수출이 19.4%, 수입이 25.3%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수입비중이 수출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중국의 역내수입 비중이 역내 수출비중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일의 경우 NAFTA, EU27, ASEAN+3 등과 비교하면 아직 역내 무역 및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1> 각 경제권의 역내 무역 및 수출 비중(2010년)

출처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3국간의 역내무역을 국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역내 수입비중은 2000년의 647억 달러에서 연평균 4.9%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3,143억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한편 역내 수출비중은 동 기간 중 연평균 3.6% 증가하여 2010년에는 1,89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역내 수출비중이 2000년의 389억 달러에서 연평균 3.7% 증가하여 2010년에는 1,4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동 기간 중 연평균 3.0% 증가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동 기간 중 수출, 수입이 각각 3.5%, 2.4%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별 역내무역 의존도를 보면(2010년), 한국의 역내무역 의존도가 3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수출이 31.1%, 수입이 32.0%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27.5%, 26.2%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0%, 22.9%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역내수입 비중이 수출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국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와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를 수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유럽과 북미로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구조와 삼각무역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이 한·중·일 3국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공급거점(manufacture hub) 과 중심시장(purchasing hub)이라는 2중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표 2> 한·중·일간의 무역구조(단위 : %)

	일본				한국				중국			
	대한국		대중국		대일본		대중국		대한국		대일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0	6.4	5.0	2.2	5.1	19.4	26.6	0.9	3.2	-	0.4	14.7	14.2
1995	7.1	5.1	5.0	10.7	13.6	24.1	7.3	5.5	4.5	7.8	19.1	21.9
2000	6.4	5.4	6.3	13.5	11.9	19.8	10.7	8.0	4.5	10.3	16.7	18.4
2002	6.9	4.6	9.6	18.3	9.3	19.6	14.6	11.4	4.8	9.7	14.9	18.1
2004	7.8	4.9	13.1	20.7	8.6	20.1	19.6	13.2	4.7	11.1	12.4	16.8
2006	7.8	4.7	14.4	20.5	7.5	17.4	24.7	15.4	4.6	11.3	9.5	14.6
2008	7.6	3.9	16.0	18.9	6.7	14.0	21.7	17.7	5.2	9.9	8.1	13.3
2009	8.1	4.0	18.9	22.3	6.0	15.3	24.0	16.8	4.5	10.2	8.2	13.0
2010	8.1	4.1	19.4	22.1	6.1	15.1	25.1	16.8	4.4	10.0	7.6	12.8

출처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또한 3국 중 일본의 역내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일본의 역내수출 비중을 보면, 2000년의 약 10% 수준에서 2010년에는 27.5% 까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대일 수출비중이 감소하여 역내수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대한민국 수출이 큰 변화가 없고, 대일본 수출이 감소하여 전체 역내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편 3국간의 무역수지를 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대한 무역적자와 대일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⁶⁾

이처럼 역내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중·일간의 무역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3국간에 수직적 분업구조와 삼각 무역구조가 형성되어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의 부

6) 중국과의 무역통계 및 무역 수지의 경우 홍콩경유의 무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품 및 가공품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00년대 들어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2009년의 일본과 한국의 대중 부품수출 비중을 보면, 한국이 10.3%에서 34.3%로, 일본이 8.3%에서 25.1%로 급증하고 있다. 동 기간의 중국의 최종제품의 수출비중을 보면 대일 수출비중은 14.2%에서 9.6%로 감소하였고, 대한국 수출비중은 1.6%에서 2.5%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역내수출 비중을 보면(2010년), 12.0%(대한 수출 4.4%, 대일 수출 7.6%)로 3국 중에서 가장 낮아, 중국의 최종제품의 수출이 역내수출보다는 역외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한·중·일, ASEAN4간의 분야별 수출비중(단위 : %)

수출국 상대국	수	일본			한국			중국			ASEAN4		
		1990	2000	2009	1990	2000	2009	1990	2000	2009	1990	2000	2009
가 공 품	일본	-	-	-	26.3	13.6	8.5	13.8	11.6	8.3	35.9	22.7	16.6
	한국	11.9	11.4	15.5	-	-	-	3.9	6.3	7.6	5.7	7.6	6.5
	중국	6.5	16.4	26.7	3.2	28.3	36.1	-	-	-	3.7	9.3	14.5
	ASEAN4	13.1	12.7	11.5	12.0	8.5	8.9	7.0	4.4	6.4	4.7	7.8	10.4
부 품	일본	-	-	-	12.4	10.2	5.3	3.9	12.0	7.6	7.6	9.8	5.8
	한국	7.6	6.5	5.9	-	-	-	9.5	4.2	5.5	2.0	4.3	2.8
	중국	2.1	8.3	25.1	1.4	10.3	34.3	-	-	-	1.6	5.3	23
	ASEAN4	11.0	12.0	12.3	5.7	7.9	5.4	2.9	4.5	7.1	3.8	8.2	8.5
최 종 제 품	일본	-	-	-	18.6	11.1	4.9	9.9	14.2	9.6	13.9	13.7	9.6
	한국	3.7	4.0	4.7	-	-	-	0.6	1.6	2.5	0.8	1.4	1.6
	중국	2.1	4.6	14.8	0.3	4.1	20.6	-	-	-	0.7	1.7	10.5
	ASEAN4	5.5	4.7	6.3	2.4	2.8	3.1	1.0	1.1	2.5	2.1	2.7	5.8

주 : ASEAN4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임.

출처 :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RIETI-TID2010에서 작성

이러한 3국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와 삼각무역관계는 중국이 2001년 WTO 가맹 이후 세계의 공급거점과 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심화되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구미선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3국간의 무역·분업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3국간의 역내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전기·전자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와 기계설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⁷⁾ 한국의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보면(<표 4>), HS10자리 기준으로 11,881품목의 2.5%에 해당하는 상위 300품목의 수출입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의 상위 300위 품목의 경우, 수출비중이 86.8%, 수입비중이 68.0%이고, 대일본의 경우 수출비중이 76.7%, 수입비중이 72.9%이다.

<표 4> 한국의 대중, 대일 수출입 품목 집중도(단위 : %)

품목수	총수출입		대중국		대일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상위50위	54.2	46.3	61.5	39.0	46.1	41.3
상위100위	65.0	56.4	72.4	49.2	57.7	53.4
상위200위	75.1	65.8	82.0	60.7	69.5	65.7
상위300위	80.3	71.2	86.6	68.0	76.7	7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HS10자리 기준(11,881품목)

출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1, 39)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지역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접투자의 움직임을 보면, 한·중·일의 역내투자는 1990년대 들어와 급증하면서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나,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국간의 직접투자는 주로 한국과 일본에 의한 대중국 투자가 중심이고, 양국의 대중투자 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양

7) 한·중·일간의 부품·소재 등 품목별 무역구조,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이홍배(2002), 金奉吉(2012a) 참조.

국의 경제규모로 보면 한국의 대중투자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증가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2000년대 들어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7년의 55억 달러(신고액 기준)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대외투자에 차지하는 대중투자 비중도 2005년의 39.1%를 정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중투자는 2011년에 126.5억 달러(신고액 기준)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총 대외투자에 차지하는 대중투자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1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를 보면, 그동안 몇 차례의 투자 붐을 거쳐 2011년에는 24.4억 달러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한투자 비중도 2005년의 3.8%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증가는 스미토모화학 등 대형 소재업체들의 한국시장 확보와 함께 한국이 미국, EU, 인도 등의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을 수출거점화하려는 목적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대중투자과 비교하면 중국의 대한 및 대일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정부가 국책으로써 대외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중국기업도 기술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외국기업 매수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정부의 제도적인 준비가 미비하고, 중국기업들도 해외진출전략 부재, 국제화 인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ETRO 2011, 187-191). 그러나 최근 중국의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일본의 산요전기를 인수하면서 일본시장에 진출한 사례 등으로 보면 향후 중국기업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가 한층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표5> 중국의 국가·지역별 대내투자 추이
(투자금액 기준, 단위 : 100만 달러, %)

순 위	2007		2009		2011		점유 율
	국가·지역	금액	국가·지역	금액	국가·지역	금액	
1	홍콩	27,703	홍콩	53,993	홍콩	77,011	66.4
2	영국령버 진섬	16,552	대만	6,563	대만	6,727	5.8
3	한국	3,678	일본	4,117	일본	6,348	5.5
4	일본	3,589	싱가폴	3,886	싱가폴	6,328	5.5
5	싱가폴	3,185	미국	3,576	미국	2,995	2.6
6	미국	2,616	한국	2,703	한국	2,551	2.2
7	케이만 섬	2,571	영국	1,469	영국	1,610	1.4
8	사모아	2,170	독일	1,227	독일	1,136	1.0
9	대만	1,774	마카오	1,000	프랑스	802	0.7
10	모리셔스	1,333	캐나다	959	네덜란드	767	0.7

출처 : 중국상무부 「中國投資指南」 각년도

특히 2012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에 서명하였다. 3국간 투자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대중투자자와 관련하여 현지사업 활동에 있어 법적인 안정성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인해 투자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일FTA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합의는 3국간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최초의 제도적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고, 이는 한·중·일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중·일 간의 무역·분업 구조, 투자를 보면, EU, NAFTA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역내 비중이 낮고,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분업구조 하에서 수출입품목이 소수품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중·일FTA 체결로 제

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한국과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의 증가와 함께 3국간의 산업간 무역과 수평무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북미, 유럽 등 선진국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신흥국을 포함하여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통합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한·중·일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와 삼각무역구조를 고려하면, 중국의 수출 감소가 한국과 일본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효과를 최소화하고, 역내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핵심국인 한·중·일이 협력하여 시장통합을 통한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6> 한·중·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2국간 협정과 비교)

주요 규정		한·일투자협정 (2003년 발효)	일중투자협정 (1989년 발효)	한·중·일투자협정 (2012년 서명)
내국민대우	진출 단계	○	×	×
	진출 후	○	△ (일부 유보)	△ (일부 유보)
최혜국대우	진출 단계	○ (FTA예외있음)	○	○ (FTA예외있음)
	진출 후	○ (FTA예외있음)	○	○ (FTA예외있음)
계약준수 의무		×	×	○
성과 요구 금지		○	×	○
지적재산권의 보호		×	×	○
투명성 확보(법령 등의 공표)		○	×	○
자금이동의 자유		○	△	○ (승인기간제한)
분쟁처리(ISDN)		○	△ (일부 제한)	○

출처: 日本 經濟産業省 (2012) 등에서 작성

2. 한·중·일의 FTA정책

한·중·일 3국은 아태지역 및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한·중·일FTA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3국 모두 어떻게 한·중·일 FTA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1) 일본의 FTA정책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A/WYO체제하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⁸⁾. 특히 일본정부는 2010년 11월 9일, 일본 통상정책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포괄적 경제연계에 대한 기본방침’(이하 ‘EPA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EPA 기본방침’은 ①전 품목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EPA 추구, ②TPP 참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여건 조성, ③이를 위한 농업·규제 개혁 등 국내개혁의 선행적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PA 기본방침’의 수립 배경은 신흥국의 부상, 일본경제력의 추세적 저하, DDA의 부진, 세계적인 FTA의 확산 등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지체되고 있어 경제성장 및 발전기반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내부개혁의 부진과 이로 인한 FTA 체결이 부진한 탓에 일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EPA 기본방침’ 채택 이후, 2011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담에서 TPP협상 참가를 표명하였다⁹⁾. 일본의 TPP협상 참가표명은 그동안 경쟁국에 비해 부진했던 FTA체결을 가속화하면서 국

8) 일본 통상정책의 전환 배경 등에 대해서는 石川幸一(2011), 김봉길(2011, 54-59)참조.

9) 정확하게는 TPP협상 참가를 위해 기존의 TPP협상국들과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었음. 이는 일본이 TPP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협상국들의 허가가 필요하고, 현재 교섭을 진행중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정부가 국내 반대여론, 정치적 리더십 부족 등으로 인해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石川幸一, 2012; 金奉吉, 2012b).

내개혁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동시에 타개하고자 하는 다목적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내부 성장동력 상실, 동 일본 대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의 돌파구로 TPP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PP참가는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EU와의 FTA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주도권 쟁탈전, 한국과 미국, EU와의 FTA 체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¹⁰⁾

동아시아지역 및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TPP 협상 참가표명은 동아시아 지역 및 아태지역의 경제권 형성 등과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PEC 및 FTAAP가 진전이 없고, ASEAN+3 또는 ASEAN+6 등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또한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이 TPP에 참가하게 되면 미·일중심의 TPP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일본이 TPP협상 참가표명 후에 캐나다, 멕시코가 협상참가를 표명하는 등 APEC 가맹국들의 TPP가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TPP도미노 현상), 이에 따라 FTAAP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의 TPP협상 참가표명은 동아시아지역 및 아태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이 TPP협상에 참가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아시아지역 및 아태지역에서 미일 동맹을 통해 경제·정치적인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일본 FTA정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역내 주도권 확보와 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이 종래의 ‘역내국과의 FTA 활용’에서 ‘미국 주도의 TPP 활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경제권 형성에 대해 중국은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은 TPP협상 참여와 함께 ASEAN+6에 의한

10) 日本内閣府(2010)는 일본이 TPP에 참가하지 않고, 일·EU FTA, 일·중 FTA도 체결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각각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은 시장점유율 저하 등으로 인해 GDP가 0.13%-0.14%(약 0.6조-0.7조 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CEPEA, 한·중·일 FTA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일본은 중국과 함께 2011년 8월의 ASEAN+6 경제담당 장관회의에서 EAFTA, CEPEA협상의 진전을 위해 주요 4분야의 협의체 설치를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동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 협의체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아태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을 활용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FTA정책

중국의 FTA정책은 2001년 WTO가입 이후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중국의 FTA정책의 배경에는, WTO가입을 계기로 FTA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정비되었다는 것과 세계적인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이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경계심과 견제가 심해지면서 중국으로써는 ASEAN 등을 중심으로 주변국·지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 위협론을 완화하면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FTA체결 상황을 보면, 정치·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FTA를 활용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들을 보면, ASEAN, 칠레,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의 경우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고는 하나,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¹²⁾ 물론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GCC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FTA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¹³⁾

이러한 중국의 FTA전략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1) 중국의 FTA정책과 관련해서는 Yang, Jian(2009), Wang, Min(2011) 을 참조

12) 中島朋義(2012, 56-61)

13)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는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 자원 및 에너지 확보, 무역 불균형 해결 등을 위해서도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FTA를 통하여 역내의 대중국 위협론을 완화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또는 전략적 우위 확보, 특히 일본과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주변국과의 FTA 활용 등 경제적 의도보다는 전략적 의도에서 FTA를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ASEAN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고, ASEAN+3에 의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을 주도하는 등의 움직임에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ASEAN+3을 중심으로 한 EAFTA 창설을 통해 역내 패권을 다진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본의 TPP참여 표명 이후 이러한 전략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부분적으로 협력하면서 한·중·일 FTA, ASEAN+6를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광역 FTA(RCEP)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TPP에 참가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 및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일본의 TPP협상참여에 대해 경제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Li 2012).

다만, 중국이 궤도를 수정해 바로 TPP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폭넓은 국내개혁과 자유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빠른 시일내의 TPP참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TPP협상 참가표명과 동시에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경제권 형성과 호주, 유럽 각국과의 2국간 FTA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선진국들과의 FTA에는 지적재산권 문제, 환경규제, 노동문제 등 중국의 입장에서 합의에 곤란한 분야가 많아 협상장벽이 너무 높다고 하겠다. 현재 FTA를 추진 중인 국가를 보아도 주요국은 한국과 호주 정도이다. 한·중·일FTA에 대해서는 일본이 TPP협상 참가를 표명할 당시에는 한·중·일FTA를 포기하고 한·중FTA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아시아FTA(EA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TPP참가로 TPP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의 표준 모델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권형성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2년 5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FTA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3) 한국의 FTA정책

한국도 WTO에 의한 다국간 협상을 통한 무역확대를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FTA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은 2003년 9월에 FTA전략을 담은 FTA로드맵을 발표하고,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FTA로드맵에서는 경제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FTA에 적극적인 국가와 동아시아 주변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그리고 미국, EU 등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이나 신흥국인 인도, 중국 등은 중장기적인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일본, 싱가포르, ASEAN 등과 협상을 시작하였고, 최초의 FTA체결국은 경제규모는 크지 않으나 FTA에 적극적인 칠레가 되었다.

그러나 FTA로드맵에 의한 협상 순위는 일본과의 FTA협상이 중단되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규모와 무역규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FTA전략이 전환되었다. 2006년 2월에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시작하였고, 2007년 5월에는 EU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2월에 발족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였다. EU와의 FTA는 자동차 등 이해대립이 큰 분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2010년 10월에 조인에 성공하여, 2011년 7월에 발효시켰다. 그 외에도 2010년 1월에는 인도, 2011년 8월에는 페루와 각각 FTA를 발효시켰고, 2012년 3월에는 한미FTA를 발효시켰다. 이러한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FTA체결국은 세계 전체 GDP의 약 60%, 무역비율도 약 40%에 달할 정도로 한국은 단기간에 FTA의 허브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신아시아외교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한국이 아시아에서의 FTA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 역내국과의 FTA를 조기체결을 추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구상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EU라는 양대 경제대국과의 FTA체결 이후, 한국의 FTA 전략이 다시 아시아 중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중FTA가 2011년 5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중·일FTA도 정부간 협상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EAFTA, CEPEA, TPP의 움직임과 관련해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 일본,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중시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중·일FTA와 관련해서는 한국으로서도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기와 방법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역할 및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도 한·중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한·중·일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즉 한·중·일FTA의 경우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먼저 한·중 FTA, 한·일 FTA 등 2국간 FTA를 체결한 후에, 이를 매개체로 하여 일본을 참여시켜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 지역에서는 영토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인한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부문에서도 경쟁관계의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변화를 보면 ‘한·중 FTA’는 한국의 전략대로 ‘한·중·일 FTA’로 수렴되기 위한 전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IV. 한·중·일FTA의 필요성과 과제

FTA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역외 국가들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한·중·일 3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내경제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고 있다. 한·중·일간에도 역내무역과 투자확대에 따른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시장주도의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어 왔고, 또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환경문제, 국제테러, 영토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협력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아시아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중·일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또한 3국간에는 그동안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신뢰 관계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한·중·일 3국의 FTA정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중·일FTA에 대한 3국의 입장은 상호 이해관계는 다르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3국간의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표7> 참조).

<표 7> 한·중·일FTA와 관련한 각국의 주요 입장

	경제적 요인	지정학적 요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허브국: 거대경제권과의 FTA 완성 · 중국시장 선점, 중국과 대만의 FTA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일간의 중개역할로 역내 위상 강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한 역내시장 확보 · 미국주도의 TPP 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미일동맹에 대한 대응 ·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로 역내 주도권 확보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진 FTA 체결 만회, 한·중FTA 견제 · 역내시장 확보로 국내경기 장기침체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주도권 확보: 중국 견제 · 미·중간의 헤게모니 경쟁에 대한 중개 역할로 영향력 제고

출처: 필자 정리

이러한 한·중·일FTA를 둘러싼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은 물론 한·중·일 3국간에도 ‘시장중심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심화’와 ‘지정학적인 패권주의의 심화’라는 2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 지역은 제도적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지정학적으로는 역사적 유산의 잔재, 영토분쟁 등 극복하기 어려

운 갈등이 존재하는 복잡한 지역이다. 특히 지금까지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핵심국인 한·중·일간의 제도적 경제권 형성의 지연이 동 지역의 광역경제권 형성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도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 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하고,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중·일 3국도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역내국가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국지적·기능적인 협력 체제를 제도적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동아시아 및 한·중·일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민간주도의 무역, 대외직접투자, 금융·자본자유화에 의한 역내생산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이라는 시장중심의 경제통합을 제도적인 경제통합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의 경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확대 분야를 발굴하여 가치사슬 연계에 따른 공동의 산업 협력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김봉길/김인중 2010).

한편 한·중·일FTA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3국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도 적지 않다. 먼저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3국간에 존재하는 민감품목들이다. 일본의 경우는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문제 등이고, 한국은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일 무역적자 문제, 중국과의 농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서비스시장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제도개혁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민감분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한·일 및 한·중 등 2국간 FTA협상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이와 관련한 자유화 수준이나 일정 등과 같은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3국간의 역사인식, 영토 분쟁, 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이들 문제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 등의 요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간에는 역사문제 및 영토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지역내 군사·안보적 충돌 가능성마저 여전히 남아있으며, 경제부문에서도 3국간의 수평적 경합영역이 확대되면서 경쟁관계의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일본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의 중일 및 한·일 간의 영토분쟁 심화로 인한 새로운 민족주의의 확산 등이 안전보장 차원에서의 결정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태지역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도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역패권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를 봉쇄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TPP 협상에 일본을 참여시키려고 하듯이 미국이 배제된 어떤 형태의 동아시아 FTA나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한·중·일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경제·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일 FTA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과 아태지역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패권구도를 바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중·일FTA와 관련하여 촉진요인을 최대화하고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면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국이 직면한 동아시아 지역 및 아태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3국이 경제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중층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3국의 공동 이익실현과 지정학적인 대립구조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정치적 다원화와 포용성의 확대, 경제적인 호혜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의 강화, 해양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영토분쟁의 정치문제화 자제와 평화적 해결 노력, 싱크탱크와 전문가의 교류협력 강화, 다자안보 협력메커니즘의 구축 등과 같은 중층적인 협력네트워크의 형성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한·중·일FTA와 관련해서는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수렴성, 경제적 보완성 및 기대 이익, 역내 안전보장의 확보

등이 최대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FTA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한·중·일FTA가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주의와 민족주의에서 탈피하고, 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역내 지역경제권 형성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중·일 3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한·중·일FTA가 최우선의 과제이고, 한·중·일 중 어느 한나라가 배제된 어떤 형태의 제도적 경제권도 완결된 형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의 FTA추진과 관련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장중심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심화’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지정학적인 패권주의의 심화’라는 정치·안보적인 요인이 실질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중·일FTA 체결을 위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촉진요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3국이 경제권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로드맵과 중층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한·중·일간의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유지하면서, FTA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FTA 추진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역사인식 문제의 청산, 그리고 영토분쟁과 역내 패권경쟁에 대한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과거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부추기면서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부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결정에서는 분쟁을 극복하고 역사·정치 문제와의 분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역사문제의 중심에서 있는 일본은 관련국들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3국의 협력사무국을 한·중·일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적 성격을 가진 총괄기구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장 모네가 말 한 것처럼 “제도 없이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은 한·중·일FTA 추진에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한층 치열해 지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위상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지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해 한국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미·일·중에 의한 헤게모니 쟁탈전에 휘말려 한국이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TPP 참여, RCEP 등 동아시아 광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제휴 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TPP참여 여부, 한·일 FTA 등에 대한 영향과 전략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중·일FTA 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실제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한국이 전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을 중재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국과 일본이 양쪽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도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자제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중개국(Hub country)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봉길(2011). 『일본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연구』. 제2011-4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김봉길·김인중(2010). “환동해 경제협력의 필연성과 정책 대안.” 『아태연구』. 제17권. 제3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1). 『한·중·일 FTA의 경제,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평화 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연구소, p. 39.
- 이홍배 외(2002).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2004).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홍택·박명호 편(2011). 『동아시아통합전략(II):한·중·일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阿部一郎·三浦秀次郎·NIRA(2008). 『日中韓FTA-その意義と課題一』. 日本經濟評論社.
- 石川幸一(2011). “日本のFTA戦略.” 馬田啓一·浦田秀次郎·木村福成 編著. 『日本の通商政策』. 文眞堂.
- 石川幸一(2012). “日本のFTAとTPP.” 國際貿易研究所. 『國際貿易と投資』. No. 88.
- 金奉吉(2008). “東アジアにおける經濟統合の必然性.” 飯田剛史·金奉吉·星野富一 共著. 『東アジア中の日本-第3章』. 富山大學出版會, pp. 43-59.
- 金奉吉(2012a). “韓國の部品·素材産業の競争力と政策的課題.” 富山大學經濟學部. 『富大論集』. 第50卷. 第1号.
- 金奉吉(2012b). “TPPと北東アジアFTAへの影響.” 環日本海經濟圈研究所(ERINA). 北東アジア經濟發展國際會議. 發表資料.
-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2012). 『東アジアの地域包括的經濟連携(RCEP)をどう見るか』. 日本貿易振興機構.
- 日本經濟産業省(2012). 『投資協定の概要と日本の取り組み』. 日本貿易振

興機構.

- 中島朋義(2012). “TPPと東アジア經濟統合.” 馬田啓一·浦田秀次郎·木村福成. 『日本のTPP戰略』.
- 日本內閣官房(2010). “包括的經濟連携に關する檢討狀況.”
- 日本內閣官房(2011). “包括的經濟連携の現狀について.”
- “Joint Study Report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日本經濟産業省. December 16, 2011.
- Ann, choong yong, Baldwin, Richard E. and Cheong, Inkyo(2005).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Springer, Netherlands.
- Li, Wentao(2012). “New Trands of Asia-pacific REI and Chinse Future Stageic Alternative.” August 27. Seminar on the Process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REI. University of Toyama.
- Scollay, Robert(2011). “Trans Pacific Partnership: Challenges and Potential.” paper presented at Jap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s 70th Anniversary Symposium. Kyoto. June 11.
- Aggarwal, Vinod and Shujiro Urata(2006). *Bilateral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Origans, Evolution, and Implications*. Rutledge.
- Yang, Jian(2009). “China’s Competitive FTA Strategy: Realism on a Liberal Slide. ” Solis, M., Stallings, B. and Saori N. Katada (eds.).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Palgrave Macmillan, UK.
- Wang, Min(2011).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y of Chin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ggarwal, Vinod K. and Lee. Seungjoo(eds.).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Springer, Germany.

| 논문투고일: 2012년 11월 15일 |

| 논문심사일: 2012년 11월 23일 |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3 (2012)

The Necessity of a Korea·Japan·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Bong-Gil Kim

(Faculty of Economics, Univ. of Toyama)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a Korea-Japan and China(KJC)FTA and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e KJC FTA, while researching FTA policy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division of labor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of trade among KJC, If the KJC FTA has been concluded, the expansion of intra-regional investment and inter-industry trade is expected. Therefore, the KJC FTA is also required as a new momentu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hree countries, through the development to a network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from the network of functional cooperation that has been accumulated so far. Additionally, the KJC FTA also is in the need for the formation of institutional economic zone to overcome the geopolitical limitations in East Asia and Northeast Asia.

It can be said that the delay of 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ong Japan,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biggest hurdle i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the Northeast area. the KJC FTA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and Asia Pacific region. Especially, while enhancing the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in economic terms, we should promote

the FTA to overcome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friction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in order to maximize the promotional factors while minimizing obstacles of the KJC FTA, the three countries shoul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close cooperation and consensus for the mutual benefit from medium- and long-term standpoint. And now it is the time for three countries to provide the political leadership in order to build a multi-layered network and roadmap.

However, the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expanded under the mutual trust considering the uniqueness and diversity of each country. Enhanced the mutual interests and the political leadership of each country are also needed to build regional economic zone.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play the role of an arbitrator to prevent China and Japan from striving for regional hegemony.

Key words: RCEP, TPP, Geopolitical Factors, *de facto* Economic Integration, *de jure* Economic Integration